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⑧ 인구구조)

# 목 차

## ■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⑧ 인구구조)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인구구조 부문의 문제점 .....	2
3. 인구구조 부문의 비전과 전략 .....	5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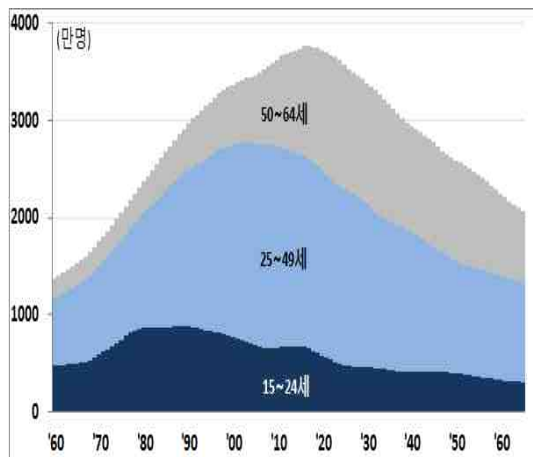
#### ■ 개요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양질의 노동력이 꾸준히 늘어나며 노동투입과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구변화는 미래에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노동력이 점점 고령화되며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며 경제·사회적 충격을 줄일 대안들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 ■ 인구구조 부문의 문제점

인구구조 부문에서 발견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이다. 201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총저축률이 감소하여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행**이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2017년에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OECD 평균인 1.68명 보다 현저히 낮으며 전세계 224개국 중 221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고령사회 목전에 와 있으며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3.8%로 유소년인구 비중(13.1%)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된다. **셋째, 외국인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다.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2~15년 동안 연평균 대비 9.5% 증가하며 2015년 기준 19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체류자는 2012년 이후부터 늘어나는 추세며 외국인 범죄자수는 2010년 1.9만 명에서 2015년 기준 3.8만 명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인구수 증가, 불법체류자 확대, 외국인 범죄자 증가 등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

<그림> 노령화지수, 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0~14세)/노인인구(65세 이상).

## ■ 인구구조 부문의 비전과 전략

**(비전)** 향후 한국경제가 인구구조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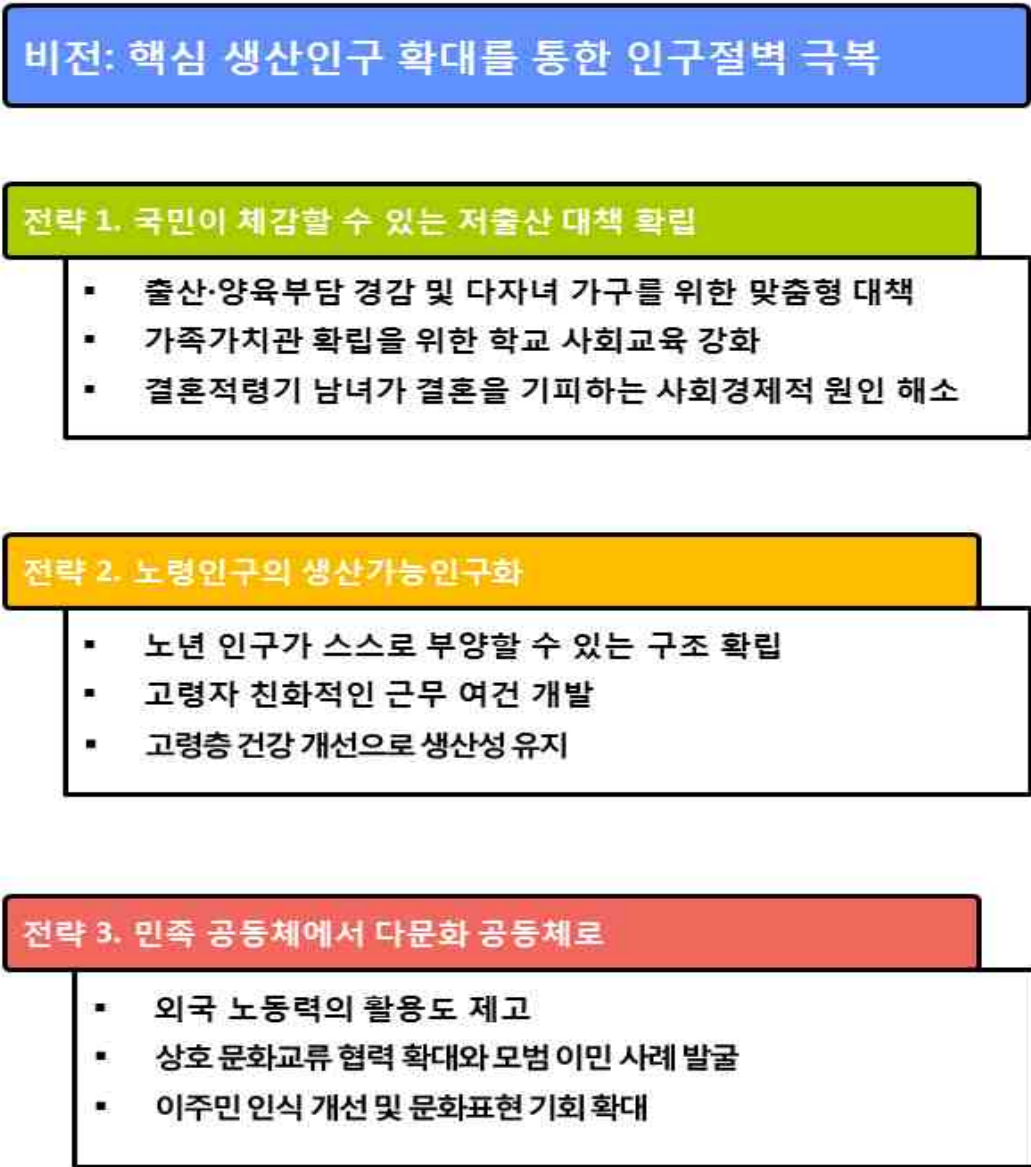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부문 3대 전략으로는 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확립, ② 노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화, ③ 민족 공동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로이다.

**(과제)** 제시된 전략 중 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출산·양육부담 경감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자녀 교육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소모적인 교육 경쟁으로 교육 비효율성, 교육 불평등, 사회이동성 악화 등을 초래하는 학벌사회, 대학서열체계 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둘째,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사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양성평등 사회 건설과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편 등을 고려하고 성인대상 민간교육사업 지원 등 사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결혼적령기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청년들은 교육기에서부터 취업 준비를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와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을 돕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② 노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넷째, 노년 인구가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처지와 숙련 정도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령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전직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 정비를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개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근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고령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작업 환경과 작업의 난이도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근로 분야가 선정되면 해당 분야의 고령자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는 근무시간 축소,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고령층 건강 개선으로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동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은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노인건강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육체뿐 아니라 노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 **민족 공동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꾼제, 외국 노동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적정 수준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덟째, 상호 문화교류 협력 확대와 모범 이민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 기반 문화시설 및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자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인 이민자가 국내에 이민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홉째, 이주민 인식 개선 및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조기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을 제고하고 일방적 한국 문화의 주입이 아닌 쌍방향 교류의 수단으로서 미디어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그림> 인구구조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 1. 개 요

-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양질의 노동력이 꾸준히 늘어나며 노동투입과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도움
    - 한국은 높은 출산율과 보건환경 개선으로 인한 영아사망률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쳐 인구가 1967년 3,013만 명에서 1984년 4,000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5,000만 명을 돌파
    - 2016년 기준 5,080.1만 명으로 세계 27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인구인 74.3억 명 중 0.7%를 차지
  - 과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속도와 인구구조 등은 향후에는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
    - 한 국가의 인구 변화는 자연적 변동인 출생과 사망 그리고 사회적 변동인 이민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
    - 미래에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노동력은 점점 고령화되는 가운데 젊고 역동적인 인구의 국내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인구구조 변화는 거시경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재정 등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 미침
    -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고 노인인구 증가는 저축의 절대규모를 낮추고 자본 공급을 축소시켜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며 경제·사회적 충격을 줄일 대안들을 찾는 것이 요구됨
    -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변화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며 예측 측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예정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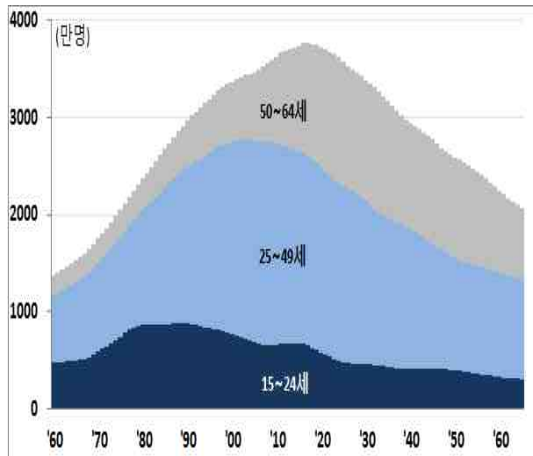
## 2. 인구구조 부문의 문제점

- 인구구조 부문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행, 외국인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 갈등 등을 들 수 있음

### ① 생산가능인구 감소

- 201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2.7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 3,726.6만 명, 2030년 3,387.8만 명, 2040년 2,943.1만 명, 2050년 2,590.5만 명, 2060년 2,244.4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듦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 축소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총저축률을 낮춰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저해
  - 국내 잠재성장률 중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2016~20년 -0.1%p, 2021~25년 -0.3%p, 2026~30년 -0.4%p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주도

<그림>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

<그림>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②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행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까지 하락

- 비혼과 만혼이 일반화 되고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다자녀 출산 기피 등으로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sup>1)</sup>은 1.17명까지 줄어들음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처음 대체출산율 밑으로 낮아졌으며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은 OECD 평균인 1.68명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전세계 224개국 중 221위에 해당

- 한국은 고령사회<sup>2)</sup> 목전에 와 있으며 2017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0~14세)를 앞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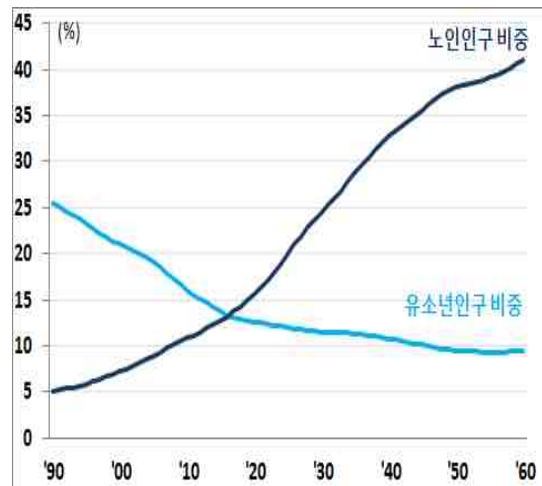
-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3.8%로 유소년인구 비중(13.1%)을 처음으로 넘어섬
-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에서 약 41.0%를 차지할 것이며 노령화지수는 급증하는 추세

<그림> 노령화지수,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주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0~14세)/노인인구(65세 이상)×100.

<그림> 노인 및 유소년 인구 비중



자료 : 통계청.  
주 :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 유소년인구(0~14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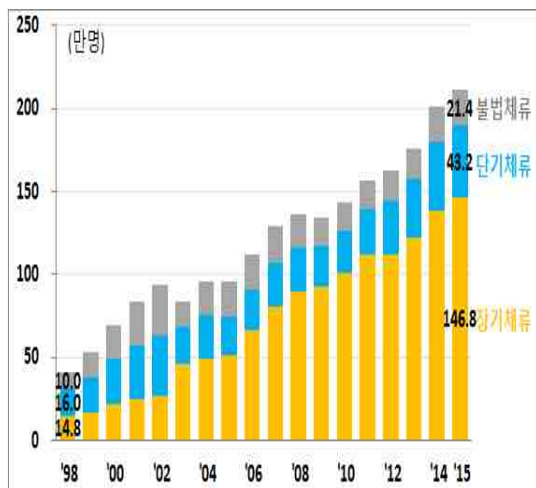
1)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  
2)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③ 외국인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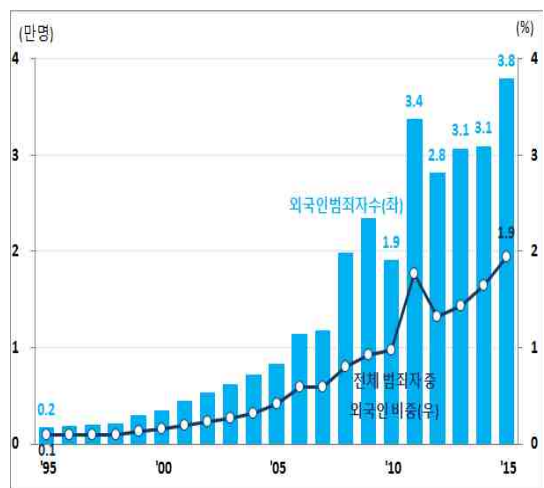
-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체류자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임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2~15년 동안 연평균 대비 9.5% 증가하며 2015년 기준 190.0만명 수준까지 증가
  - 국내 체류외국인 중 장기체류자(146.8만명)는 77.3%, 단기체류자(43.2만명) 22.7%를 차지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범죄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외국인 범죄자수는 2010년 1.9만명에서 2015년 기준 3.8만명까지 두배 가까이 증가
  -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에는 0.1%로 미미하였으나 2010년 1.0%, 2015년 1.9%로 큰 폭으로 증가
  - 외국인 인구수 증가, 불법체류자 확대,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 등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외국인 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자료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 : 외국인 체류자=장기체류자+단기체류자.

<그림> 외국인 범죄자수



자료 : 검찰청.

### 3. 인구구조 부문의 비전과 전략

<그림> 인구구조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비전: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전략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확립**

- 출산·양육부담 경감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사회교육 강화
- 결혼적령기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전략 2. 노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화**

- 노년 인구가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여건 개발
- 고령층 건강 개선으로 생산성 유지

**전략 3. 민족 공동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로**

- 외국 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 상호문화교류 협력 확대와 모범 이민 사례 발굴
- 이주민 인식 개선 및 문화표현 기회 확대

□ 인구구조 부문 비전: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 인구구조 부문 3대 전략

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확립

② 노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화

③ 민족 공동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로

□ 인구구조 부문 9대 과제

**전략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확립

① 출산·양육부담 경감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 임신 전부터 출산 후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
  -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추고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분만취약자 의료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
  - 아이돌봄서비스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는 부모의 직접양육과 시설보육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설보육 이용 이후 시간에 대한 보호기능까지 수행
  - 정부차원의 양육지원정책은 각 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네트워크 형성

- 출산장려금 정책은 다자녀 출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 아이의 출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현재와 같은 규모의 출산장려금은 다자녀 출산엔 실효성이 적음
  - 선행연구<sup>3)</sup>에 따르면 첫째 아이 한 명을 낳기 위해 요구되는 출산장려금은 약 127만원, 둘째 아이는 3,500만원, 셋째 아이는 1억7,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보육·주거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를 통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 과도한 교육비 지출 구조로 인한 자녀 양육 부담과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소모적인 교육 경쟁으로 교육 비효율성, 교육 불평등, 사회이동성 악화 등을 초래하는 학벌사회, 대학서열체계 등을 완화
  -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교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등을 통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

## ②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사회교육 강화

-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 수단 마련
  -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과 자녀를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논의 필요
  - 자녀를 갖게 되는 주된 동기인 출산 과정의 소중한 경험, 노후보장, 양육을 통한 역할 수행, 개인성장의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애정을 받으려는 욕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

3) "Pro-natalist Cash Grants and Fertility: A Panel Analysis" Korean Economic Review(2016) Sok chul Hong et al.

- 양성평등 사회 건설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편 등을 고려하고 성인 대상 민간교육사업 지원 및 민관협력사업 등 사회교육 활성화

### ③ 결혼적령기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 청년들은 교육기에서부터 취업 준비를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와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을 돕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
  -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 부담인 주거관련 문제에 대해서 청년기부터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돕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
-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양적, 질적 확대 필요
  -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의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함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로시간제 등 제도가 기업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전략 2 노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화

### ④ 노년 인구가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고령인구 및 베이비부머의 상당수는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취업의사가 상당히 높은 반면 기업은 고임금의 고령층을 기피
  -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
  -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처지와 숙련 정도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
  -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해 고령자를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고려

-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노인창업 등을 지원

- 단순히 고령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전직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 정비를 통해 질적 경쟁력 제고
-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 기업에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노인창업을 지원하여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방안 마련
-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고령자들의 노후자금 마련과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

⑤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여건 개발

- 고령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근로 분야를 발굴

- 이를 위해 기업들의 작업 환경에 관한 파악과 작업의 난이도 분석이 필요
- 적절한 근로 분야가 선정되면 해당 분야의 고령자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
- 이외에 고령자를 상대하는 근로 분야에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을 기대

- 고령자의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거나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림으로써 고령자 노동력을 적극 활용

- 고령자 인력의 활용을 위해 채용, 교육, 근무형태, 직무디자인, 퇴직에 이르는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 기업차원에서 고령자의 육체적 조건에 적합한 직무를 재설계하고 근무시간 축소,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개발

⑥ 고령층 건강 개선으로 생산성 유지

-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동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은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다양한 질병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
  - 또한, 흡연이나 음주같이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인들에 대한 사전적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노인건강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육체뿐 아니라 노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리
  - 노인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인의 건강에 대한 실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
  -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전략 3**    민족 공동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로

⑦ 외국 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 고령인구, 여성, 청년의 고용률 제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노동부족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므로 적정 수준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취업지원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여건 조성
  - 외국인 인력의 수요조절 메커니즘 구축 및 외국인 인력의 활용도 제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연계 등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단기적 노동수요를 맞추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 정책은 저숙련자 단순노동력 활용으로 한정되고 고용주와 고용자간 갈등을 높여 한국 이미지를 떨어뜨릴 가능성
  -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숙련 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외국인 노동력 정책의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전문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 양성
-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강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현장 환경 조성이 필요
  -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설정
  - 전문외국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입 노력을 강화
  - 국내 유입 전문인력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하는것이 시급

#### ⑧ 상호 문화교류 협력 확대와 모범 이민 사례 발굴

- 이주민과 내국인 간 상호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시설과 공공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민들이 지역 주민들과 문화교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
  - 이주민들과 내국인들이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갈등 예방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
- 외국인 모범 이민 사례를 발굴
  - 외국인 이민자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 9 이주민 인식 개선 및 문화표현 기회 확대

- 이주민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 내국인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체계화 및 활성화
  -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 및 문화 콘텐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조기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을 제고
  - 초중고 교육부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외국인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포용력을 높임
  -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주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이주민의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미디어 접근성을 강화
  - 이주민의 문화향유 및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내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
  - 다문화방송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이주민의 방송·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방적 한국 문화의 주입이 아닌 쌍방향 교류의 수단으로서 미디어 역할 제고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